

# 지난해 도내 소비자 상담 1만7931건

### 전북도 '소비자 상담 결과' 분석

#### 소비자상담센터 접수된 건 중 '유사투자자문 상담' 이 최다... 계약 관련 상담시 소비자 주의 필요

#### 도, 유관기관 협업으로 찾아가는 교육·이동상담실·인터넷 소평물 감시활동 등 권익 보호 활동 추진

지난해 전라북도에서 유사투자자문, 의류·섬유, 신유형상품권, 이동전화 서비스 휴대폰·스마트폰 관련 소비자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와 한국소비자지원 광주지원,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공동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2021년도 도내 소비자상담 총 1만7931건을 분석한 결과, 전년도(2만92건) 대비 11.2%(2,261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은 유사투자자문(791건), 의류·섬유(560건), 신유형상품권(466건), 이동전화서비스(382건), 휴대폰/스마트폰(302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사유로는 휴대폰/스마트폰(품질·AS관련)을 제외한 전 품목 모두 '계약 관련'이 가장 많아 계약체결 시 환불 조건 등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소비자 상담품목 중 중가율이 높은 품목은 신유형상품권(717.9%), 기타금융상품(190.3%), 모바일 정보이용서비스(96.4%), 주식(41.8%), 국내결혼중개(38.5%) 등이었다.

기타 금융상품과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의 경우 '부당행위'와 관련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 품목들은 모두 '계약'과 관련한 불만이 주를 이루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49.1%(8,659건)로 가장 많았고, 군산 15.0%(2,004건), 익산 14.0%(1,948건), 정읍 4.5%(60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50.2%(8,994건)로 여성 49.8%(8,928건)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여성 소비자는 의류·섬유(386건)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고, 남성 소비자는 유사투자자문(521건)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7.4%(4,769건)로 가장 많았고, 50대 24.6%(4,282건), 30대 22.1%(3,840건), 60대 14.7%(2,556건), 20대 7.3%(1,27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 소비자의 상담비율은 전체 42.9%로 전국 33.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별로는 '일반판매' 7,762건(43.3%), '전자상거래' 4,626건(25.8%), '기타' 2,347건(13.1%), '전화권유판매' 1,205건(6.7%), '방문판매' 731건(4.1%), '기타통신판매' 723건(4.0%), 'TV홈쇼핑' 466건(2.8%) 등의 순이며, 이중 국제온라인거래와 전화권유판매 방식이 전년 대비 증감률이 각 35.1%, 3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야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예방교육 및 법 위반 사업자의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와 한국소비자지원 광주지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연령별 맞춤형 교육, 홍보·정보제공 강화, 이동상담실 운영, 인터넷소평물 감시활동 등 다양한 권익보호 활동을 추진 계획이다.

경로당 다문화가족,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계약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예방법을 포함한 실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축제·행사 등과 연계하여 현장 이동상담실·소비자정보전시회를 꾸려 피해구제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화권유판매·전자상거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하고 안전한 온라인 시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와 공동으로 소비자활동 전문가 15여명을 투입하여 인터넷소평물 사업자 1만8천여개 업체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소평물업체와의 업무협약 및 간담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유호상 기자

# 여객선 반값운임·어촌뉴딜사업 점검

###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군산~어청도 여객선 운항 현장 체험

전북도는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및 관계자가 2일 어청도, 고군산군도 등을 방문해 '여객선 반값운임' 지원사업과 '어촌뉴딜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나 국장은 이날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여객선 반값운임 지원사업의 전산 매표시스템을 점검하고, 해운조합 및 선사를 방문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당부했다.

'여객선 반값운임 지원'은 군산시, 부안군 소재 12개 도서를 방문

하는 여행객에게 여객 운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누구나 제한없이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국 최초 사업이다.

이어, 어청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군산~연도, 군산~어청도 항로를 분리 운항할 수 있도록 국비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어촌뉴딜사업 중 명도 사업장 현황을 점검하고, 도내 김양식 주산단지인 고군산군도 김양식장의 직황 등도 둘러봤다.

/유호상 기자

# 도, 4월까지 친환경농업 직불금 접수

전북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을 신청받는다.

친환경 직불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도와 시·군이 자체 지원하는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두 가지다.

국비사업은 무농약인증 3년(회), 유기인증 5년(회), 유기지속의 경우 무기한 지원한다.

도 자체사업은 국비지원에 이어 사업지속을 위해 추가적으로 무농약 5년(회), 유기지속의 경우 무기한 지원한다.

도 자체사업은 국비지원에 이어 사업지속을 위해 추가적으로 무농약 5년(회), 유기지속의 경우 무기한 지원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동물분뇨와 짚 등을 이용한 퇴비, 천적 곤충이나 미생물농약 등을 활용한 유기농법으로 논(벼 등)을 경작하면, ha당 70만 원, 채소·특작 등 밭농사는 130만 원, 과수는 ha당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유기지속의 경우 유기농법의 50% 단가로 지원한다. 화학비료를 최소화하는 무농약은 논(벼 등)은 ha당 50

만 원, 채소·특작은 110만 원, 과수는 120만 원을 지원한다. 농가당 0.1ha에서 최대 5ha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시·군과 함께 국가지원의 친환경농업 직불제 밭농가가 관행농업으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을 지원한다.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은 친환경농업에 발을 내디딘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지속 실천할 수 있도록 생산비를 지원한다.

무농약과 유기지속에 지원하며, 단가와 지원 면적은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같다. 사업대상자는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같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하다. 농업인과 법인은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오는 4월까지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5월부터 10월까지 지급조건 확인과 친환경농업 이행 및 인증 여부 등 이행점검 후 11월 초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실뱀장어 불법 포획행위 근절... 도, 특별단속 실시

### 수산자원 보호·항행 선박 사고 예방 목적

### 서해어업관리단·해경·시·군 등 합동 단속

전북도가 해마다 증가하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특별단속에 나섰다.

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약 3,000km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내외의 깊은 바다에서 산란하고, 약 6개월 동안 성장한 후, 실뱀장어 형태로 변태돼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오는 매우 특이한 생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공 종자생산이 매우 어려운 어종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뱀장어 양식은 불법어업인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오

는 실뱀장어를 포획해서 키우는 형태로 자연 자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포획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 종자 생산이 어려워 실뱀장어 가격이 높다 보니 허가받지 않은 해역에서의 불법어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항계내 무분별한 어구 설치로 항행 선박들의 안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도는 이러한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금강하구, 새만금 방조제 곱소만 해역 등의 해상 및 육상에서 주·야간 구분 없이

불법어업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또, 항계내에 설치돼 선박의 통항 안전성을 저해하는 불법 어구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어업인·어업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포획물 소지·유통·매매 등의 금지에 대해 교육 및 홍보도 병행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 산림레포츠 활성화·일자리 창출 위한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생 모집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국립등산학교·산림교육원 협업 운영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국립등산학교와 산림교육원은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산림레포츠지도사 양성과정' 제1기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위해 오는 10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민들이 안전

하고 편리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지도·관리하는 전문인력이다.

산림청은 지난 2020년 6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통해 산림레포츠지도사 육성에 대한 시행령과 시

행규칙을 제정했다.

교육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전문·생활·유소년·노인·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중 산림레포츠 자격종목(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암벽등반, 오리엔티어링, 로프체임시설 등)를 보유한 자여야 한다.

/유호상 기자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과정은 위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산림레포츠지도사 양성교육기관에서 약 2주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최종평가를 통과한 자에 한해 발급한다.

교육신청은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 누리집(forest.go.kr) 통해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등산학교 교육운영실(033-632-6653) 및 산림교육원(081-570-7441)으로 문의 가능하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전북도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학균)은 새로운 시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평생학습 모델을 발굴하고자 전라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평생학습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에 중점을 뒀다. 총 3개 분야, 23개 내외의 도내 평생교육 기관·단체에 총 1억6천1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접수는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4월 중에 지원기관 선정심사를 거쳐 지원 프로그램을 최종 확정 후, 선정기관 교육 등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평생교육진흥원(http://www.jite.or.kr)과 전북도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전북도평생교육진흥원(063-276-8311)으로 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 “직무행위 관련 악의적 음해, 안될말”

### 유기상 고창군수, 안철수 대선후보 고창 방문 관련

유기상 고창군수는 2일 지난달 28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고창군청을 공식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것과 관련 6·1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저질적이고 악의적인 음해 행위를 비난하고 나섰다.

유 군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선 후보라는 처음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고창을 방문했다'며 "고창 장남인 이날 안철수 후보는 고창군청을 공식 방문한 후, 유세를 마친 뒤 고창군청을 공식 예방해 유기상 군수와 차담을 나누고 고창군 행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지극히 정상적인 유기상 군수의 직무행위를 악의적으로 편향해 조직적인 음해공작이 이뤄졌다"며 "군수는 고창군민과 고창군

발전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정당·정파라도 가리지 않고, 모든 정파에 찾아가서 협조를 구해야하는 입장이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창을 찾는 손님 누구든지 따뜻하게 맞이하고 예우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제이자 고창군수로서 올바른 자세"라며 "하물며 대통령 후보의 공식방문을 문전박대하고 내치자는 것이 저들의 주장이라는 말이냐"고 따졌다.

특히 "선의로 기념촬영을 한 군민들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무시하고 명예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존경하는 군민들께서 지역발전 위한 고창군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적극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리사욕을 위해 군민 갈라치기로 선거판을 혼탁하게 하려는 음흉한 세력들의 도를 넘는 음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 “‘청년기회국가’로 나아가자”

###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 청년들에게 투표 참여 호소 "이재명 후보의 정책, 전주형으로 발전시킬 것"



2일 조지훈 전 전라북도경제통산진흥원장은 지역 청년들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층의 대선 투표 독려 및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본 시리즈 공약과 연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만큼 이번 투표에 꼭 참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청년기회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

보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주형 기본소득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만 19~34세는 물론 소득공백 노인(만 60~64세)까지 연간 100만원 지급을 목표로 최초 30만원부터 시작해 단

계적으로 지급금액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후 전주시민 전체로 기본소득 지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는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해 전주형 기본대출과 청년의 자산형성 기반에 힘을 보태고자 전주형 기본저축을 시행하겠다고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은 약속했다.

완전히 새로운 전주를 만들기 위한 일로, 전주가 이재명 기본소득의 첫 실험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은 "대한민국과 전주의 미래인 청년들이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보면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정책인 만큼 이를 반드시 전주형으로 발전시켜 청년들을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희망과 기회를 주는 대한민국의 위를 투표 참여를 위한 우리 청년들에게 응대해 달라"며 "그동안 청년에게 힘이 돼 준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